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0월 14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15분 36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당정분권론과 정당 민주화

최근에 내가, 당정분권론이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당들이 대체로 후보 대권 분리론으로 받아들이면서 당내 연합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당내 동교동을 의식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연합세력을 의식한 것이냐, 그런 관측, 그리고 결국 당권을 장악할만한 자신감도 없고 하니까 당정분권론을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요런 관측들을 했었죠. 아울러서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이 주자들한테 다 물어가지고 이인제, 김근태는 찬성이고, 동교동은 시큰둥 뭐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치의 현실적 조건을 전혀 도외시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정치의) 지도체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에서의 자유투표제, 크로스보팅 제도를 많이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그 당을 통한, 당의 장악력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는 비민주적 행태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비판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거든요. 동의하는 것이고, 실제로 있어서 대통령제 국가의 모범인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의회는 대통령과 분리된,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도 않고 의회를 지배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이고, 한국이 유독 이렇게 대통령이 당을 통해서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시대의 잔재거든요. 공화당 정권의 잔재거든요. 청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미국식 대통령제로 완전히 돌아가는, 미국식 정당제도로 돌아가는 방법과 정당체제는 이대로 두고라도 당정을 분리하면 유럽식 정당제도에 대통령제라는 그런 묘한 것이 됩니다. 본시 대통령제, 내각책임제가 아닌 곳에 당의 통제력이 강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죠.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저렇게 당이 느슨하고, 내용을 자세히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당권을 갖지 않음으로써,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당권을 장악하

지 않음으로써 당과 의회가 자율화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당구조는 전통적으로 정당의 통제력이 강한 정당구조거든요. 미국은 또 정당의 통제력이 아주 약하고, 원내 중심이고 통제력이 느슨하고, 한국은 원내 중심이 아니면서 정당구조가 통제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합니다, 정당의 구조를. 때문에 당정분리를 해주면 된다. 해주면서 당과 의회의 자율권, 말하자면 의회의 자율권을 당으로 맡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을 민주화해 가면 되는 거죠. 현실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력이 원체 그동안 막강했기 때문에 당정분리만 해버려도 당은 아주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분리만 해도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내 민주화가 안 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서 민주화 조치의 일환인데(요).

그걸 왜 이때 얘기를 꺼냈냐 하면 바로 우리 당의, 최근에 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횡이라고, 대통령의 전단 전권 행사에 대해서 직접 문제제기는 못하고, 결국 비서실과 동교동이라는 측근조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라. 비서실과 동교동에 대해서 원가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인사쇄신을 요구한 겁니다. 인사쇄신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무튼 잠복된 상태로 있거든요. 잠복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해소되어야 될 문제란 말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해소될 순 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헌상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고 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을 뿐더러 지금까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전에 수십 년간 전횡해오던 것을 지금 와서 당장 바꾸라고 하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갈등문제를 말하자면 정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당내 이런 갈등과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나 현재의 당 현실과 미래에 대한 변화의 요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당정분권론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 권력교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당이 다음 소위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할 때 당헌을 우선 바꾸자. 제도적으로 당헌을 바꾸고, 경과조치를 두어서 대통령의 임기 말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당헌이 적용되도록 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당헌이 적용되게 한다든지,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현재 당헌대로 가고 적절한 경과조치를 두고 시행시기에 관해서 대통령 교체 시기라든지. 그런 체제를 전제로 해서 당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역시 당헌이지요, 그지요? 당 지도부 구성을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새로운 당 운영을 하자, 그런 제안이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후에 집단지도체제로 갈 건지 단일지도체제로 갈 거냐 라는 것은 협의, 당의 중지를 모아서 처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했던 것은 단지 무슨 연합이나 무슨 이해관계를 동교동을 전제로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당의 민주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한나라당과의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당의 민주화, 정치 민주화에 관해서 한나라당과의 차별화가 가능하거든요. 한나라당이 우리 당과 똑같이 총재 전권체제이거든요. 총재 전권체제이고, 실제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 편협하다거나 또는 보복적 리더십, 홍준표 씨의 이야기지만, 보복적 리더십이라든지, 지난 번 공천과정에서 소위 독단적 그 권력행사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체제 자체가 총재 전권체제로 되어 있고 당정 단일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차별화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항상 주장해 왔던 것이 리더십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이전부터 대개 이런 표현이지만, 분권적 리더십, 그 다음에 수평적 리더십, 그 다음에 개방적 리더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런 주장들 중의 일환으로서 내가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당의 지도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리로 나가야 된다. 당정 분리가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하나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총재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총재직을 떠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규정이 그렇게 돼있으면, 경임 못하게 돼있으면, 선출할 때 미리 따로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되면 총재직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죠.

반론으로는 후보가 당권을 갖지 않으면 별로 당이 선거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명분으로, 이유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내세우면서 칠십일(71)년도의 경험을 들어 얘기한다고요, 동교동계에서는. 내가 보기엔 칠십일(71)년도에 그것 때문에 패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사고의 전제는 총재가 공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공천권 이퀄(=) 계보, 공천권을 밀천으로, 말하자면 공천권을 고리로 한 계보정치, 이런 말하자면 구시대적 정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단이죠.

정치란 것은, 근대적 정치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차는 공천권이 결국은 당원들의 손에 돌아가게 되고, 공천권이라는 건 당원들 손으로 넘어가고 결국 계보가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이 선진적인 정치거든요. 그리고 공천권으로 소속 의원들을 통제하는 그런 독재적 체제

가 아닌 바에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후보가 당권을 갖든 갖지 않던 선거는 마찬가지로 지죠. 후보가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말하자면 지렛대로 해서 선거에 충성을 담보하겠다는 것, 그것 가지고는 이미 정치를 못하는 시대거든요. 낡은 사고의 틀을 전제로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해집단으로, 정당을 이해관계로만 운영해 가고 공천권으로 먹살을 쥐고 목줄을 감아쥐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우러나온 것이 '당권이 없으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것은 지난 번 우리가 통합민주당 시절에 이기택 총재에게 당권을, 당권은 이기택 총재에게 후보는 김대중 후보(로) 해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끝내 공동대표를 주장했던 동교동계의 논리, 칠십일(71)년도에도 그거지만 그때도 그 논리를 주장했었어요. 그때하고 상황이 또 다르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적 상황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우리가 수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당의 제도나 민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당에서 원조라 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해왔고, 우리 사회의 큰 변화 중에 정치부분에 정치영역에 이 부분과 민주화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